

◇오인철대한건설협회도회



장은 12일 오후
5시 강릉시 성산
면 원주지방국
토관리청 강릉
국토관리사무소

에서 열리는 도 건설산업 발전
을 위한 간담회에 참석.

정비사업 늘어 건설업계 수주난 극복

올 수주금액 전년比 상승세 전환

도내 건설업계가 악성 수주난에서
다소 벗어났다.

11일 대한건설협회 도회에 따르면
올 1~8월 도내 종합건설업체의 총
수주금액은 1조65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5% 올랐다. 또 수
주물량건도 1,620건으로 지난해보
다 10.2%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도회는 수주물량의 상승 원인을
노후화된 상하수도 정비사업 등으로
꼽았다. 실제 88억원 규모인 강릉 초
당1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비롯해 삼척 하장면과 미로면에서
각각 82억원, 41억원의 상수도 확장
공사가 이뤄졌다. 또한 원주 기업초
교(143억원)와 정선 도교직원수련
원분원(40억원) 등 도내 곳곳에서 이
뤄진 신축공사도 한몫했다.

지난 1~7월만 하더라도 수주금액
이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2.13% 감
소한 반면 8월에 들어서 각종 신규
공사 물량으로 다소 호재를 보였다.
추석 연휴 이후에도 겨울철 대비 다
양한 보수공사가 이뤄지면 도내 건
설업계는 수주 가뭄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유재규기자

경제인 동정



오인철
대한건설협회
강원도
회장은
12일 오후 5시 강릉
국토관리사무소에
서 열리는 '강원도
건설산업을 위한 간
담회'에 참석한다.

건설업계, SOC 예산 확보 팔건었다

“예산 감소폭 20% 업계 타격”

도 건설교통국·정부 방문 설득

속보=정부의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축소 결정으로 생존의 기로에 선 강원 건설업계(본지 9월 11일자 1면 보도)가 SOC 예산 추가 확보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대한건설협회 도회에 따르면 정부가 결정한 내년 SOC 예산은 17조 7000억원으로 올해 예산 22조 1000억원보다 20% 감소한 수준이다. 매년 10% 안팎이던 감소폭이 확대된 것으로 관급공사가 전체 공사의 70%인 도내 건설업계에 적지 않

은 타격이 예상된다.

때문에 대한건설협회 도회는 최근 강원도 건설교통국과 간담회를 갖고 SOC 예산 추가 확보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향후 도내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예산 축소에 대한 문제점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며 SOC 예산의 적정투자 기대효과를 홍보하는 등 정부 설득에 나설 방침이다. 도회 관계자는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 강원도회, 대한전문건설협회 강원도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강원도회 등으로 구성된 강원건설단체연합회로 안건을 확대해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신관호

SOC 예산 확대 '역풍' 맞는 정부

올해 대비 4조4000억원이나 삭감한 내년도 SOC(사회기반시설) 예산안을 두고 날 선 비난이 쏟아지면서 정부, 여당이 진땀을 빼고 있다. 적극적인 해명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력 약화 우려와 지역공약조차 외면했다는 지자체들의 반발은 갈수록 확산되고 있다.

“경제 성장동력 꺾고
지역공약 외면하나”
지자체 등 반발 확산 속
야권 공세 갈수록 거세
국회서 증액 가능성도

특히 지역여론을 등에 업은 야당 등 정치권까지 맹공을 퍼붓고 나서면서 향후 국회에서 SOC예산의 증액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11일 관계기관 및 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달 말 정부의 예산안 발표 직후부터 SOC 예산 축소에 대한 각계 각층의 우려와 비난 여론이 거세지면서,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가 연일 해명(설명)자료들 배포하며 진화에 나섰다.

정부는 국내 SOC스톡이 충분한 수준에 도달했고 동계올림픽 지원 시설이 마무리되는 등 자연 감소분도 적지 않다는 입장이다. 또 올해 SOC사업의 불용예산도 적지 않아 경제·사회적 영향은 크지 않고 대신 복지 분야 주거부문 등의 투자는 늘렸다고 항변하고 있다.

하지만 우려와 반발은 좀처럼 사

그라들지 않고 있다. 상당수의 전문가들은 SOC스톡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도 크게 부족하다며 정부안에 조목조목 반박하고 있다. 불용예산도 건설투자를 지연시킨 '비정상' 예산일 뿐, 대안이 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적게는 3분의1, 많게는 '반토막' 예산안을 받아든 지자체들은 더욱 격앙된 모습이다. 대동령의 지역 공약사업마저 삭감 또는 삭제됐다며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특히나 지자체들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터라 국회와의 연대를 통해 반드시 원상회복을 시키겠다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그 결과 SOC 예산안은 이번 정기국회의 최대 쟁점 중 하나로 떠올랐다. 정부 발표 전부터 SOC 축소를 비난했던 자유한국당을 비롯, 호남 '홀대론'을 앞세운 국민의당까지 '맹공'을 퍼붓고 나서면서다. 양당은 선심성 복지예산을 늘리느라 지역경제를 파탄으로 내몰고 있다며 반드시 적정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버르고 있다.

이렇다 보니 SOC 예산의 증액 가능성은 점점 커지고 있다. 한국책연구기관 관계자는 “특정 지역의 문제를 떠나, 2분기만 보더라도 건설투자 위축으로 인해 우리 경제 전반의 회복세가 꺾여버렸다”며 “정부, 여당이 SOC 투자 축소 기조를 이어간다 하더라도, 잠재 성장력과 지역경제까지 무시할 수는 없는 만큼 국회의 증액 여지는 충분해 보인다”고 말했다.

방송권기자 skbong@

5개 건설단체, 오늘 SOC예산 증액 등 호소문 발표

“건설이 복지이고 일자리입니다”

전국 200만 건설인들이 내년 도 SOC(사회기반시설) 예산 증액을 위해 한목소리를 낸다.

11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대한건설협회와 대한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협회 등 5개 건설단체는 12일 서울 담화회를 열고 “건설이 복지이고 일자리입니다”라는 제목의 호소문을 발표한다.

유추현 대한건설협회 회장 겸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회장은 이날 호소문에서 내년도 SOC 예산안이 17조7000억원으로, 올해보다 20% 삭감돼 국회에 제출된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국민 복지와 일자리, 안전·생명 등을 실현하기 위해 최소 20조원대의 SOC 예산을 유지해줄 것을 정부 등에 건의할 예정이다.

건설업계는 우리나라 교통 인프라가 여전히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실제 한국의 1인당 도로 총연장(35위), 자동차 1대당 도로 총연장(33위), 국토계수(인구·면적)당 도로 총연장(31위)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국 가운데 최하위권이다. 통근시간도 OECD 주요국 평균인 28분의 2배 이상인 62분

이다.

건설산업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타 산업보다 높다. 건설업의 고용유발계수는 10.2로 전 산업 평균(8.7)보다 높다. 건설 종사자도 약 193만명으로 전체 취업자의 7%가 넘는다. 특히 강원, 충남, 제주 등 지역 내 총생산액(GRDP)에서 건설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20%가 넘는 지역도 상당수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SOC 투자를 1조원 줄이면 일자리가 1만4000여개 감소하고, 경제성장률이 0.06%포인트 하락한다”고 말했다.

인프라 노후화에 따른 시설 개량이 제때 이뤄지지 않으면 국민안전 위협은 물론이고 2배 이상의 추가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미국도 목학회에 따르면 노후 인프라 시설에 대한 성능개선 시기를 놓치면 소요 예산이 10년 후엔 약 173% 증가한다. 국내의 안정적인 SOC 투자를 발판삼아 해외 건설시장에 진출하고 있는 건설업계의 기반도 위협받을 수 있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국민경제 발전과 국민의 행복 실현을 위해선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SOC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태형기자 kth@

7월 국내 건설수주 9.8兆... 1년새 33.6% 급감 공공·민간 동반 부진 영향

공공·민간 시장의 동반 부진 탓에 지난 7월 국내 건설수주가 1년 전보다 30% 넘게 급감했다.

대한건설협회가 11일 발표한 국내 건설수주 동향조사에 따르면 올해 7월 국내 건설공사 수주액은 9조7985억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33.6% 감소했다. 공공부문 수주액은 2조6446억원, 민간부문 수주액은 7조1539억원으로 각각 작년 7월보다 42.1%, 29.8% 줄었다.

공공부문은 울산신항 남방파제(2-2공구) 축조공사, 부산항 신항 토도 제거공사 등 굵직한 공사가 있었지만 도로·교량·철도·궤도 등에서 부진해 토목 수주가 33.6% 감소했다.

건축 수주도 공장·창고 외에 주거·사무실, 학교·병원·관공서 공사가 줄줄이 감소해 52.1%나 쪼그라들었다.



민간부문은 토목에서 62.2%, 건축에서 26.5% 감소했다. 김포신곡6지구 도시개발사업 토목공사, 풍무역세권개발사업 부지 조성공사, 송도 8공구 A1블럭 공동주택 신축사업 등 신규 수주가 이어졌

지만, 전체적으로 상하수도과 공장·창고 등을 빼 대부분의 공종이 부진했다.

임성울 건협 실장은 “공공부문은 상반기 재정 조기집행에 따른 수주 감소와 계절적 요인으로 큰 하락세를 보였고, 민간부문도 8·2부동산대책 이전부터 재건축·재개발 등 주택부문이 둔화세로 전환되기 시작했다”고 분석했다.

올해 1~7월 합산한 국내 건설수주액은 89조783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3% 늘었다. 이는 지난해 전체 수주액(164조8000억원)의 54%에 해당한다.

각종 선행지표도 하향세다. 올 상반기 건축물 착공면적은 -23.3%, 건축허가면적도 -20.6%로 각각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올해 7월 건설업 취업자는 197만6000명으로 전월 대비 1.0% 줄었다.

김태형기자 kth@